

예산심사 시작부터 '삐걱'

예결위, 민부론 팩트체크·민주연구 보고서 논란에 파행 야, 경찰청장 사과 요구... 내달 7일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초반부터 파행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경제비전 '민부론'(民富論)을 조목조목 반박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다는 논란과, 경찰청이 전 직원에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보고서 일독을 권했다는 논란에 대해 보수야당이 관련 부처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앞서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여야 간 정책 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을 공격하는 실탄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헌입법 행위이자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의 "경찰청장이 특정 정당의 특정 사안이 적시된 연구 보고서를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직원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주장이 늘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게 만들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간사협의의 통해 예결위 전체회의의 개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세부내용에서 여야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개의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지상욱 의원은 간사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민부론'과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또한 "시간이 늦어져 오늘 예결위를 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종합정책질의는 다음 달 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는 열지 못했지만 30일부터 예정된 부별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9일 오후 국회에서 2시에 개회 예정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이 간사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문재인 정부 2년 반 암흑의 시간"

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입법 반란을 맞은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 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명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과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며 "그러나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



의 기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독주도 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유승민 "15명 의원들과 창당추진위 매듭"

"안철수 기다릴 시간 없어"

바른미래당 비당권과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은 29일 "현역 의원 15명이 모두 모이는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신당창당추진위원회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변혁 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위원장 대다수가 신당에 대해서 창당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달라, 창당 로드맵을 빨리 만들자는 요구

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을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한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그 뜻 그대로"라고 했다.

현재 변혁 소속 의원은 유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출신 8명,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7명 등 총 15명이다.

순환규 대표 체제로 당을 끌고 갈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바른미래당 출신인 유승민계는 12월 탈당해 신당을 만들자는 기류가 강한 반면, 국민의당 출신인 안철수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연합뉴스

모든 사건관계자 검찰 조사시 변호인 동석

검찰, 7번째 개혁안 발표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단

당권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오늘 당 쇄신책 내놓나

책임론 확산 속 기자간담회 일주일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쇄신 요구와 함께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수습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이날 이 대표의 메시지에는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날 수도권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 등 당내 의원들과 만나면서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에도 당 중진인 원혜영·김부겸·김영춘 의원과 당의 진로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세 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였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당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가선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중도층·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났지만, 당 지도부가 이렇다 할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한 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를 통한 변화, 또 다른 한편에선 민생 중심의 이슈 부각을 통한 국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도 각종 모임을 하며 향후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쇄신 요구는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간담회 일정을 오후로 잡은 것도, 의총에서 나오는 의견까지 수렴해 당의 쇄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

양정철·김경수·이재명 회동

총선 앞 '원팀' 메시지... 친문·비문 지지자 갈등 지우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전격 회동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양 원장과 김 지사, '비문(비문재인)' 대표주자 이 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당내 분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29일 여론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저녁 수원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원장의 제안으로 만난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규정과 경기·경남도 도정 성공,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동병상련'의 심정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책회의의 참석을 위

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김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났다"며 "이 지사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고, 서로 비슷한 처지라 위로 겸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크게 보면 국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뜻과 힘을 모으자, 당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하자며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선에서의 역할 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공무원이다"라며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 원장 측 관계자는 "재판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이 지사를 격려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양 원장과 김 지사가 동지로서 '형제의 마음'으로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미묘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을 강조한 것은 친문과 비문의 갈등·대립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